

보도시점 2025. 1. 22.(수) 11:00
< 1.23.(목) 조간 >

배포 2025. 1. 22.(수)

제4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7) 발표

- 해외직구 위해제품 차단 등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 확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국가기술표준원은 「제4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5-'27)」을 발표하고, “선제적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로 안전한 어린이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5조에 따라 3년마다 수립·시행

금번 제4차 기본계획은 해외직구 증가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위해 제품의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융복합 제품 등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제품 출현에 대한 안전관리 대응을 특징으로 하며, 4대 전략과 9대 과제로 구성되었다.

4대 전략은 ❶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❷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 안전관리 강화, ❸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❹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반 조성으로 구성되었고, 전략별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바닥재 등 어린이가 자주 접하는 주요 생활용품의 주의경고 표시사항을 신설한다. 둘째,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해제품 정보는 공표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해 제품은 삭제한다. 셋째,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의 신속한 안전기준 도입을 위해 안전기준조사연구센터를 신설한다. 넷째,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우수기업을 발굴·포상하고,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5년) 폐지 등 제도를 개선한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대한민국 미래 주인공인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확보는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금번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더욱 안전한 어린이제품 사용환경을 만들고, 이와 함께 안전확보를 전제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하여 기업의 인증 부담이 완화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제4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주요내용

담당 부서	제품안전정책국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책임자	과 장	정대환 (043-870-5450)
		담당자	사무관	조영삼 (043-870-5574)



1 추진 배경

- ◇ 어린이 안전사고 증가,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국내 유입 확대, 융복합·신기술 제품의 출현 등 어린이제품 환경변화를 고려
 - ☞ 안전한 어린이제품 사용환경을 위해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어린이제품안전법」 제5조에 따라, '16년 제1차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변화하는 어린이제품 환경을 반영하여 3년마다 계획 수립·시행
 - * (1차) '16~'18년, (2차) '19~'21년, (3차) '22~'24년, **(4차) '25~'27년**

2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현황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제품 대상)
 - (사전안전관리) 위해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품목으로 지정하고, 안전기준 적합 제품에 KC마크 표기 後 시장 유통
 - *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 건수는 증가 추세(만건) : ('19) 4.8 → ('21) 8.2 → ('23) 10.1
 - (사후안전관리)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제품은 안전성조사 및 리콜, 불법제품 조사 및 벌칙 등을 통해 안전관리
 - * 안전성조사 결과 리콜명령 비율은 감소 추세(%) : ('19) 10.6 → ('21) 6.2 → ('23) 5.2
 - * 불법제품조사 위반비율은 60% 내외 수준(%) : ('19) 58.9 → ('21) 68.1 → ('23) 58.3
- 어린이제품 인증건수 대비 안전사고 건수 비율은 '19년~'21년 감소 하였으나, '22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
 - * ('20) 28.4% → ('21) 19.3% → ('22) 21.5% → ('23) 21.9%
- 어린이제품 해외직구 금액은 최근 4년 연평균('20~'23년) 897억원(전체 해외직구 금액의 약 1.6%)로 '17~'19년 평균 606억원 대비 약 43% 증가
 - 어린이제품 유통규모는 연 19.3조원('20~'23년 추정)으로 연평균 5.3% 성장
-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이 다수 출현하여 어린이제품 안전에 새로운 위해 요인 증가

3 대내외 환경변화 및 당면과제

- (안전사고) 어린이 안전사고는 꾸준한 증가 추세*이며, 가정에서 성인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제품**에서 많이 발생

* 어린이안전사고 : ('19) 2.5만건 → ('21)1.6만건 → ('23) 2.2만건

☞ 일반제품 및 가정에서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강화 추진 필요

- (해외직구)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안전기준이 부적합한 불량제품 유입 확산

*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 ('20) 787억원 → ('21)915억원 → ('22) 968억원 → ('23) 918억원

☞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관리 근거 마련 등 안전관리 체계구축 필요

- (융복합·신기술)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제품 출현*으로 신규 위해요소 지속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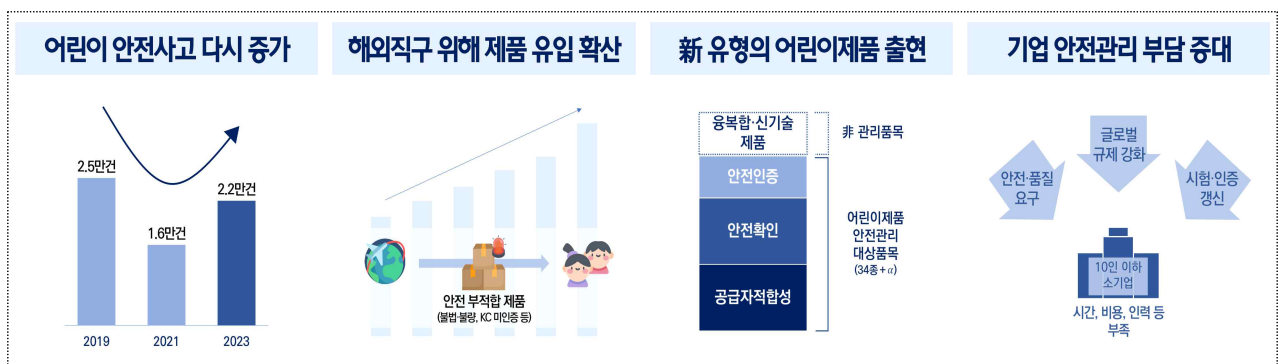
* 신기술·융복합 기능이 적용된 제품 등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제품이 다수 출현하여 현행 안전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

☞ 신규 위해요소 지속 등장에 따라 모호한 안전관리 범위·기준 정비 필요

- (생태계) 어린이제품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부족* 및 개선을 요하는 인증제도 다수 존재

* 어린이제품 관련 기업은 대부분 영세기업으로 안전규제에 대한 인력·비용 등 부족

☞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및 안전인식 제고 필요



비전 · 목표

선제적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로 어린이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저감

- 어린이제품 인증간수 대비 사고건수 비율 20% 이하

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
안전관리

-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조사 연간 500건 이상
- 유해제품 공표 및 국내유입 차단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 안전기준 정비 (제·개정 10건)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반 조성

- 안전친화기업 10개社 선정
- 어린이제품안전교육 로드맵 수립

4대 전략 · 9대 과제

1.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 ① 어린이 제품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제도 고도화
- ②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선

2. 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
안전관리 강화

- ①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 ② 국내에서의 안전한 어린이제품 유통환경 조성

3.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 ①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도입
- ② 융복합·신기술 제품 대응을 위한 안전기준 조사연구센터 신설

4.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반 조성

- ① 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우수기업 지원
- ② 기업 친화적 인증 기반 제도 개선
- ③ 어린이제품 안전인식 제고

5 주요 추진과제

1.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 현황 >

◇ (안전사고) 어린이 안전사고는 꾸준한 증가 추세*이며, 가정에서 성인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제품에서 많이 발생

* 어린이안전사고 : ('19) 2.5만건 → ('21)1.6만건 → ('23) 2.2만건

1-① 어린이 제품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제도 고도화

- ① 어린이와 성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관리 확대
 - 바닥재 등 안전사고 상위품목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주의·경고 표시 신설
- ② 가정內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
 - 소비자·시험검사기관 등을 통해 안전에 우려가 있는 제품*들을 발굴하고, 사용연령제한 및 주의경고표시 등 공통안전기준 개정

* (예) 비타민 패치, 모기 물림 방지 팔찌 등

1-②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선

- 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대상 품목 조정
 - 제품 위해도에 따라 일부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수준을 안전확인대상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균형있게 조정*
- * (수준조정 예시)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안전확인대상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 안전관리 필요 신종 어린이제품(예: 야외운동기구 등)에 대해 신규 품목으로 지정
- ② 안전기준 부적합 처리기준 개선
 - 품목별·검사항목별 위해 정도를 재검토하여 「부적합시 처리기준」의 결함내용(최중중경결함)을 조정하고, 「부적합시 처리기준」 작성 가이드라인 개발
- ③ 안전기준 개선을 통한 시험검사방법의 효율화·신속화
 - 안전기준에 규정된 시험검사항목 중 안전과 관련이 낮은 항목은 완화·정비 추진
 - 어린이제품은 「품목별 안전기준」과 「공통안전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하나, 기준이 상이한 일부 시험검사항목을 정비

2. 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 안전관리 강화

< 현황 >

◇ (해외직구)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안전기준이 부적합한 불량제품 유입 확산*

*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24년), 조사대상 227개 제품 중 32개 제품이 안전기준 부적합(부적합률 14.1%, 유해물질 검출 등)

2-①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 ① 해외에서 직접 배송되는 어린이제품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성조사 실사·공표
 - 국내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해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② 국내 대리인 지정 및 유해제품 판매페이지 삭제 권고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근거 조항 마련
- ③ 유해제품 통관단계 차단
 - 유해한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에 해당 제품 반입 금지 조치 요청

2-② 국내에서의 안전한 어린이제품 유통환경 조성

- ① 국내에서 유통되는 해외 리콜제품 모니터링 및 조치 강화
 - 43개국 리콜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국내 유통 시 판매중지·불법조사 실시하고, 외국에서 수거된 제품에 관한 조치보고
- ② 온라인쇼핑몰 협의체 확대·강화
 - 온라인쇼핑몰 협의체 참여사를 확대(16개 → 20개)하고, 협의체 내 어린이제품 분과 신설 및 쇼핑몰 운영사 대상 제품안전관리 교육 확대
- ③ KC미인증 구매대행 어린이제품 등 불법제품 안전관리 강화
 - 불법 어린이제품 모니터링 확대로 구매대행 사업자 단속 및 국내 유통 차단, KC미인증 제품 등 불법제품에 대한 판매페이지 삭제 조치
- ④ 어린이제품 안전 정보(Open API) 제공·활용 활성화
 - Open API를 활용한 온라인쇼핑몰 위해제품 신속 차단, 소비자·기업의 안전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포럼 운영지원

3.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 현황 >

◇ (융복합·신기술)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제품 출현*으로 신규 위해요소 지속 등장

* 신기술·융복합 기능이 적용된 제품 등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제품이 다수 출현하여
현행 안전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

3-①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도입

①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제·개정

- 융복합 어린이제품(야외 운동기구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규 도입하고,
신기술 적용 어린이제품(자외선 이용 완구 등)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

② 신규 위해요소에 대응한 안전관리 체계 개선

- 신규 위해요소에 대해 시험검사방법 및 주의경고표시를 개선하고,
인증받은 부품(내장된 부품, 교체형 부품)의 인증정보 표시방안 검토

3-② 융복합·신기술 제품 대응을 위한 안전기준조사연구센터 신설

① 안전기준조사연구센터 신설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內 「안전기준조사연구센터」를 신설, 안전
기준 관리를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운영
- 해외 안전기준의 제개정, 유해화학물질 관리, 안전사고 이슈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기업·소비자단체도 참여하여 의견 수렴

4.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반 조성

< 현황 >

◇ (생태계) 어린이제품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부족 및 개선을 요하는 인증제도 다수 존재

* 어린이제품 관련 기업은 대부분 영세기업으로 안전규제에 대한 인력·비용 등 부족

4-① 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우수기업 지원

① 제품 출시 前 위해성 자가진단 프로그램 개선·보급

- 제품 리스크평가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 및 보급, 사용자 교육 실시를
통해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

② 어린이제품 표시사항 자동생성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어린이제품 안전인증(4개) 및 안전확인(16개) 품목에 대해 표시사항 및
주의사항 자동생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에 제공(25년~)

③ 어린이제품 우수기업 발굴

- 안전인증 시험검사주기 연장, 시험검사비용 우선지원 등 우대사항을 통해 우수 어린이제품 기업 발굴·포상 및 제도 활성화 추진

4-② 기업 친화적 인증 기반 제도 개선

① 안전확인신고(5년) 유효기간 폐지 (「어린이제품안전법」 개정)

② 어린이제품안전법 과태료를 전기생활용품 과태료와 동일 수준으로 개선 (「어린이제품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③ KC인증 면제 절차 간소화 (「어린이제품안전법」 시행령 개정)

- 신속한 KC인증 면제 업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면제확인 업무를 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검토(면제 평균처리기간 : 2일 → 1일)

④ 본품 이외 제품(편의제공 부분품)의 안전평가·인증 단계적 확대 추진

- 제품 케이스, 인쇄 띠지, 제품 보관 주머니 등 제품에 딸린 편의제공 부분품을 본품과 함께 인증이 진행되도록 업계에 홍보하여 단계적 유도

⑤ 시험검사기관 역량 강화 및 효율성 제고

- 시험검사기관 숙련도 제고를 위해 시험·검사 일련의 절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하고, 시험검사방법의 일원화도 추진

4-③ 어린이제품 안전인식 제고

①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확대를 위한 체계 구축

- 제품 위험요소를 체험할 수 있는 지역별 안전체험관 활용도 제고하고,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로드맵 수립하여 대국민 안전인식 확대

② 어린이제품의 개발·제조·유통 단계에 있는 관계자의 안전인식 제고

- 시험·검사 항목이 많은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인증기준·인증 절차 등 관련 정보 제공(제품안전 뉴스레터 발송) 추진